

Ⅲ. 最近 大企業 不渡事態와 不渡防止協約

- (大企業의 不渡) 大企業의 不渡 事態는 1980년대 초반 이후 거의 없었으나 1990년대 들어와急増하고 있으며, 특히, 97년 들어 韓寶, 三美, 眞露 및 大農 등 세계 30대 기업의 不渡가 연속 발생함
- (不渡防止協約)
 - 政府는 추가적인 大企業 不渡를 막기 위해 金融機關 自律의 不渡防止協約을 통해 不實企業 定理를 꾀함
 - 金融機關의 부도방지협약을 통한 不實大企業 處理 모델은 기업은 살리되 企業主의 經營權은 포기토록 하는 논리임
- (不渡防止協約의 效果 및 副作用)
 - 不渡防止協約은 經營이 정상적이나 일시적으로 資金不足을 겪고 있는 企業을 구제할 수 있음
 - 그러나 장기적으로 銀行의 不實化를 초래할 수 있고, 正常化 對象 企業 이외에 다른 企業의 資金難을 加重시킬 우려가 있음
- (補完 對策)
 - 不渡防止協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不實徵候企業 선정의 公評한 基準을 마련하고, 은행과 宗금사로 한정되어 있는 채권금융단의 범위를 保險, 리스, 割賦金融 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또한 銀行圈 총여신 규모 2,500억 원 이상으로 한정되어 있는 正常化 對象企業 指定 基準을 擴大해야할 것임

1. 最近 大企業 不渡 事態 現況

○ 大企業 不渡의 略史

大企業 不渡事態는 80년대 초반 이후 없다가 90년대 들어와急増하고 있음

- 大企業의 不渡 事態는 80년초 이후 거의 없었으나 90년대 들면서急増하기 시작하였음
- 80년대 명성(83년), 국제(85년)의 부도 이후 대기업 부도는 많지 않았음
- 93년 한양의 부도를 시작으로 94년 효산, 95년 덕산, 유원, 96년 우성, 삼익약기, 건영의 부도로 이어졌음

금년 들어 한보, 삼미, 진로, 대농 등 30대 財閥企業의 不渡가 연 속되었음

- 97년에 들어와 大企業의 不渡 事態가 최고 수준에 이르렀고, 不渡 件數 및 規模에 있어서도 前例가 없는 최고 수준을 기록함
- 1월 22일 韓寶그룹의 부도 이후 3월 三美그룹이 부도 처리되고, 4월에는 眞露그룹, 그리고 5월에는 大農그룹이 실질적인 부도 기업으로 전락되었음
- 최근의 부도는 財界 順位 14위(한보), 26위(삼미), 19위(진로) 등 企業 規模와 관계없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음

2. 不渡防止協約과 新不實企業 處理 모델

○ 銀行間 不渡防止協約 절차와 正常化 企業 指定

大企業 不渡를 막기 위해 정부는 金融機關 自律의 不渡防止協約을 통한 不實企業 定理 政策을 제시하였음

- 일련의 大企業 不渡 事態로 國家 經濟의 근간이 흔들리자 政府는 새로운 不實企業 處理 方法인 不渡防止協約을 제기하였음
- 不渡防止協約은 은행간 자율협약으로 부실 징후가 있는 기업에 대해 우선 債權銀行團에서 不渡 猶豫 措置를 내리고,
- 전문기관의 資産·負債 實辭를 바탕으로 正常化 企業 또는 不實債權 整理 企業 선정 여부를 결정함

부도방지 협약에 의해 正常化 對象 企業으로 지정되면 債券回收가 猶豫되며, 自救勞力을 통해 正常化 과정을 밟음

- 正常化 指定 企業은 債券回收가 유예되는 대신 自救勞力이 필수적임
- 債權銀行團에 의해 正常化 指定 企業으로 선정되면 企業은 모든 債權回收가 유예되며, 교환 회부된 어음은 부도 처리되지만 當座去來 정지 조치를 받지 않게 됨
- 正常化 指定 企業은 債權銀行團과 협의 하에 부실 계열사 및 부동산 정리 등 自救勞力에 의해 기업 경영이 정상화되도록 해야함

- 또한 기업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기업 소유자의 財産 整理 및 株式 擔保, 經營權 拋棄 등도 불가피함
- 은행간 不渡防止協約에 따라 정상화 기업으로 지정된 회사는 眞露와 大農임

○ 政府의 不實企業 處理 모델

政府의 不實大企業에 대한 處理 모델은 기업은 살리되 기업주의 經營權은 포기토록 하는 논리로 선회된 것으로 해석됨

- 진로그룹을 최초로 金融機關의 自律的인 決意로 정상화 대상 기업으로 선정함에 따라 政府의 不實 大企業에 대한 處理 모델이 확정되었음
- 새로운 부실기업 처리 모델은 과거 “기업은 망해도 企業主는 산다”라는 논리에서 “기업은 살리되 기업주의 經營權을 포기토록 하자”라는 논리로 선회한 것으로 해석됨
- 그러나 이와 같은 논리는 모든 부실기업에 적용되는 것은 아님. 企業主의 經營 能力은 인정되나 일시적인 資金 壓迫을 받는 경우는 예외로 경영권을 몰수하지 않을 수 있다는 但書를 달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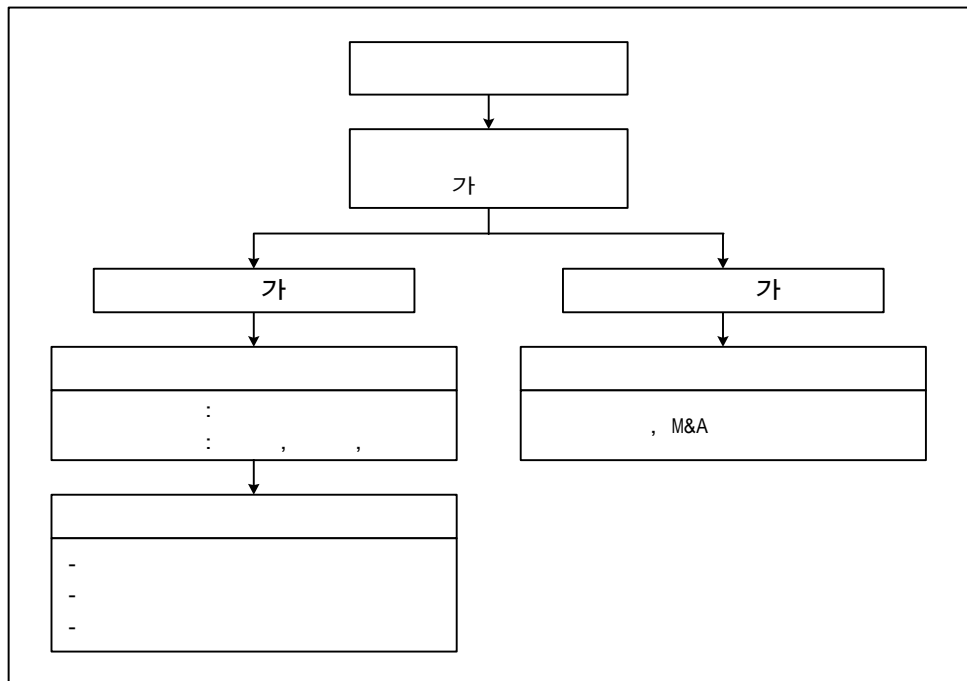
政府의 不實企業 정리는 이제 채권금융기관의 협의를 통한 자율적 결의에 의해 실시될 것임

- 債權金融機關의 자율적인 협의를 통한 부실기업의 처리 모델은 이제 새로운 부실기업 정리를 위한 政策 手段으로 인식되고 있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음
- 첫째, 한양처럼 産業合理化 業體 指定을 통해 特惠支援 方式으로 3자에게 경영권을 넘기지 않겠다는 것으로 부실기업 정리를 産業政策 審議會가 아닌 金融機關 債權 協議體를 통해 이루겠다는 것임
- 둘째, 부실 기업그룹 계열사 가운데 回生이 가능한 기업은 살려 專門企業으로 육성 한다는 것임. 예를 들면 진로그룹중 경쟁력이 있는 (주)진로만 살리고 나머지 기업은 아예 賣却,

整理하거나 破産시킨다는 것임

- 셋째, 기업주의 방만한 경영과 不實經營에 대한 責任을 철저히 묻겠다는 것으로 경영부실의 원인이 대주주에게 있다면 株式擔保 提供 → 經營權 拋棄 覺書 → 所有權 剝奪 등 3단계 전략을 통해 기업 경영에서 배제시키겠다는 것임

< 不實企業 處理의 새로운 모델 >



3. 不渡 防止 協約의 效果 및 副作用

○ 肯定的 效果

不渡防止 協約은 經營은 일시적 資金不足을 겪고 있는 企業을 구 제할 수 있음

- 金融機關의 “不渡 防止 協約”은 악성 루머로 기업 의 자금줄이 막혀 부도가 나는 企業을 正常化할 수 있음
- 소위 ‘黑字 倒産’의 경우처럼 기업 경영이 정상적 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一時的인 資金 壓迫으로 不渡가 나는 企業을 救濟할 수 있음

○ 否定的 效果

不渡防止 協約은 銀行 自律을 빙자한 不實企業 定理 政策으로 金融自律化에 逆行하는 것임

- 金融機關의 自律 協約인 “不渡防止協約”은 銀行 自律을 빙자한 새로운 不實企業 整理 政策으로 金融 自律化에 정면으로 逆行하는 것임
- 市場 經濟 原理를 強調하면서도 실제로는 정부가 특정 기업을 살리는 産業 合理化 制度에 불과함

不渡防止 協約은 장기적으로 銀行의 不實化를 초래할 수도 있음

- 장기적으로 銀行의 不實化를 招來할 것임
- 정부는 부도방지협약에 따른 資産 不實化에 대하여 해당기관이나 담당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하여 免責 特權까지 주고 있음
- 진로의 경우처럼 경영이 정상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정상화를 유도한다면 결국 '80년대의 産業 합리화 조치와 같은 결과를 낳게 되어 市中銀行의 資産 不實化로 이어질 것임

不渡防止 協約은 正常化 對象 企業 이외 다른 企業의 資金難을 加重시킬 수도 있음

- “不渡 防止 協約”은 正常化 對象 企業 이외 다른 企業의 資金難을 加重시킬 것임
- 부실 징후가 있는 기업에 대하여 第2 金融圈의 資金 回收가 集中되어 企業 資金 壓迫의 원인이 되고 있음
- “不渡 防止 協約” 지정시 자금 회수가 어려워진 第2 金融圈은 지정 회사에게 債權 滿期를 延長하는 대신 金利를 引上하여 金利 上昇 效果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음

不渡防止 協約은 財産權을 侵害로 違憲 소지가 있음

- “不渡 防止 協約”은 財産權을 侵害하는 행위로서 違憲의 소지가 있음
- 回收 어음을 故意的으로 不渡 處理하면서 當座를 持續시키는 것은 어음 保有者의 財産權을 侵害하는 결정임

- 企業의 經營權 移轉은 市場 經濟 秩序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經營權 拋棄 覺書를 要求하는 것 역시 財產權을 侵害하는 行爲임

4. 不渡防止協約의 補完點

不渡防止 協約에 따른 副作用을 最小化하기 위해 不實徵候 企業을 선정하는 기준 마련과 不實債權 全擔 機構 설치 가 필요함

- 不渡防止協約은 企業 經營 정상화에도 불구하고 은행 부실, 企業 자금난 가중 등 부작용이 있어 補完的 措置가 필요함
 - 부실징후기업의 선정의 경우 評價機關의 恣意的 이고, 政治的인 면이 있을 수 있으므로 부실징후 기업 선정의 公評한 基準을 마련해야 할 것임
 - 정상화 대상으로 지정된 企業의 自救勞力을 원활히 하기 위해 부실 系列社 및 不動產의 受託, 賣買를 전달할 수 있는 기구의 設立, 運用이 필요함

부도방지 協約의 效率性을 높이고 企業 資金難을 緩和하기 위해 債券金融團의 範圍를 擴大해야 함

- 또한 부도방지협약의 效率性을 높이기 위해 채권 금융단의 範圍를 擴大해야 함
 - 현재 不渡防止 協約을 위한 債券金融機關이 제1 금융권과 中금사로 한정됨으로서 여타 금융기관의 경우 채권회수로 企業 부실화를 촉진하는 경향이 있음
 - 따라서 債券金融團의 범위를 保險, 리스, 割賦金融 등 與信專門 金融機關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銀行圈 총여신 규모 2,500억 원 이상으로 한정되어 있는 正常化 對象企業 指定 基準을 擴大해야 할 것임

- 不渡防止協約은 正常化 對象企業을 전 월말 현재 銀行 總與信殘額이 2천 5백억 원 이상인 대기업으로 한정하고 있음
 - 與信殘額이 2천 5백억 원 이하인 中小企業들은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재벌기업을 위한 不渡防止協約에 그치고 있음
 - 따라서 正常化 對象企業 指定 基準의 擴大가 필요함 (박종곤 : jgpark@cosmo.co.kr)